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년에 즈음한 한일시민단체 공동성명>

## 일본 정부는 세계문화유산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사도 광산’의 강제노동 역사부정을 시정하라!

10년 전인 2015년 7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제철·철강, 조선, 석탄산업’ (아래 메이지산업혁명유산), 지난해 7월 27일 ‘사도섬의 금산’(이하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두 곳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던 현장이 포함되어 있다.

메이지산업혁명유산 등재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던 시기는 심사 대상 밖이라고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끌려와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한 많은 한반도 출신자 등이 있었다는 점,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정부가 징용 정책을 실시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각 현장의 역사 전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해석(설명·전시) 전략’을 조건으로 등재를 승인했다. 그러나 2020년 6월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물은 ‘민족차별도 강제노동도 없었다.’라는 하시마(端島) 주민의 증언과 영상으로 구성됐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증언은 단 하나도 없는 전시였다.

2021년 7월 유네스코와 이코모스(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산업유산정보센터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희생자를 기억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전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조사보고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등재 당시의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번 ‘역사 전체’에 대한 전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구성 자산을 ‘니시미카와 사금광산’과 ‘아이카와 츠루시 금은광산’의 근대 이전의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하여 근대유산을 제외하고 등재를 신청했다. 지난해 7월 등재 당시 일본 정부는 “특히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을 성실하게 기억하면서 결의의 권고를 충실하고 완전하게 이행하고, 한국

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사도섬의 금산'의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를 인정하고 “광업 채굴이 이루어진 모든 시기를 통해 추천 자산에 관한 전체 역사를 현장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전시 전략을 수립하고 시설·설비 등을 정비할 것” 등을 권고하고, 2025년 12월 1일까지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제2차 아베 정권 이후 일본 정부는 산업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이용해 자민족 중심주의를 부추기며 전쟁 중 강제노동의 역사부정을 추진했다. 메이지산업혁명유산 등재에서는 일본의 메이지 이후 근대사를 '산업화에 성공한 세계 역사상 특기할 만한 위업'으로 선전하며 침략의 역사를 감추기 위해 이용했다.

사도 광산에서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 특별전시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부들의 생활'에서 가혹한 노동이었지만 그것이 강제노동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아베 정권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해 조선인 강제노동을 부정하며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했는데 사도광산 전시에서도 이런 식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안내시설인 '키라리움 사도'에는 조선인 노동에 대한 전시가 없으며, 니가타현이 수집한 '반도노동자명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매년 '모든 노동자를 위한 추도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지만, 강제노동에 대한 반성도 사죄도 없는 행사이며 지난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은 참가를 거부했다. 이러한 상황은 역사문화유산을 통해 평화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유네스코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 한일 시민들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우호를 바라는 입장에서 일본 정부가 메이지산업혁명유산과 사도 광산에서의 조선인 강제노동의 진상을 밝히고 그 역사를 올바르게 기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며,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5년 7월 27일

민족문제연구소(한국),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일본)